

해외환경규제동향

2005
7

Monthly Newsletter VOL.11

'해외환경규제동향'은 환경부와 전경련이 함께 운영하는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의 월간 뉴스레터입니다

CONTENTS

헤드라인

1

EU, RoHS 적합성 증명에 대한 의견 접근

해외동향

2

유럽의회 "EU집행위의 Deca-BDE 면제 요구는 월권행위"

중국판 RoHS, 발효일 연기 불가피

독일 디젤차 입자상물질 배출표시제 도입 검토

일본, CNG차량 도입모델지역 첫 지정

미국, 트럭 배기가스 촉정신기술 공표

중국 '공공건물 에너지절약설계표준' 7월 부터 적용

바젤협약, PCBs 관리지원 소프트웨어 발표

독일, 가정폐기물의 매립전 사전처리 의무화

전문가 리포트

6

OECD 무역과환경 합동작업반 회의 결과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상인 연구위원

주요단신

7

EU각료이사회, 집행위의 수은규제안에 동의

뉴욕시의회, 폐전자제품 재활용 조례안 상정

EU REACH, 각료이사회 협의단계로

미 캘리포니아주, 온실가스 감축계획 공표

관련 국제회의 정보

8



EU, RoHS 적합성 증명에 대한 의견 접근

- 비공개 워크샵에서 1차 자체선언 등 영국측 주장 대부분 수용 -

EU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RoHS)의 적합성 증명방법을 두고 EU회원국간에 근본적인 방향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영국 무역산업부(DTI)가 개최한 워크샵에서, 참석한 회원국과 산업계간에 RoHS 준수를 자체선언 방식으로 증명하도록 의견이 좁혀졌다.

즉 2006년 7월 이후 출시되는 제품은 RoHS를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되, 생산자는 자사제품이 RoHS를 준수했다는 자체선언(Self-declaration)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출시이후 제품에 RoHS적합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시장감독기관이 제품을 시험검사하는 방안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자체선언의 방식이나 구체적 내용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이미 지난 2003년 4월 TAC회의에서 영국이 제안한 방식이다. 영국은 자국 RoHS 규정에 이 '자체선언'을 준법의 기준으로 삼고 당국이 시장 내 RoHS 준수여부를 위해 시험검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자체선언이 기본적으로는 RoHS를 준수한 적합한 제품이라는 선언이지만, 반면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책임(responsibility)에 대한 선언을 의미하게 된

다는 점이다. 따라서 책임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하는 점과 우리나라 기업과 같은 수출 제조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책임의 유효기간을 일정주기로 갱신하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

더불어 RoHS 준수여부의 실질적인 감독 책임은 회원국에 있다는 점에서, 회원국의 감독의지가 반영된 자국 RoHS법상의 제도가 추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워크샵의 결과는 영국 DTI가 정리하여 7월 TAC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4월 유럽의회가 결정(resolution)을 통해 공식적으로 EU집행위에 지적인 바와 같이 TAC는 적합성 증명이나 대상범위 등에 한 결정권한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 워크샵에서 회원국과 산업계간에 상호 의견의 접근을 본 적합성 증명방법이 다른 여러 회원국 자국법에 바로 적용될 여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U집행위도 지난 6월 16일부터 개최된 우리나라와의 환경분야 제4차 한-EU 공동위원회 실무회의에서 "한국의 제조기업이 제품의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EU회원국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주EU대표부 등



유럽의회 “EU집행위의 Deca-BDE 면제요구는 월권행위”

– 각료이사회 손에 들어간 뜨거운 감자, 기업은 ‘Deca-BDE 면제’ 크게 기대말아야 –

지난 6월 21일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난연제 PBDE의 하인인 Deca-BDE를 RoHS 적용면제로 규정한 EU집행위의 RoHS지침 부속서 개정안에 또다시 반대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Deca-BDE는 RoHS지침 부속서에서 적용여부를 위해 평가하도록 한 물질이다. 이 물질에 대해 집행위는 위해성이 없으며 현재 대체물질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점 등을 이유로 RoHS 지침의 적용예외물질로 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유럽의회는 예외의 정도를 넘어서는 개정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 실시한 위해성 평가의 결과를 무시한 점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5월의 환경위해성 평가에 따르면 Deca-BDE는 분해가 잘 안 되는 화학물질로서 동종의 PBDE중에서도 특히 유독하며 인체에 축적되는 형태일 뿐만 아니라 실험실 연구 결과 최중 포식자인 포유류 육식동물에게 생체흡수와 신경마비효과가 폭넓게 발생한다는 데이터를 담고 있다. 이러한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라 지난 3월 18일 집행위 산하의 보건·환경위해성에 관한 과학위원회가 ‘추가적인 위해성 감소를 강력히 추천’ 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또한 무시하고 있다고 유럽의회는 지적했다.

또한 의회는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가 지난 2004년 8월 채택한 2003/11/EC지침에서 Deca-BDE가 문제가 없다는 위

해성평가결과가 없는 한 즉시 Deca-BDE에 대한 위해감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사항을 지적하며, 집행위가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집행위의 이번 개정안은 RoSH지침 제5조 1항(b)에 따라 취한 조치가 아니며, 더 나아가 동 지침에 규정한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이므로 Deca-BDE에 대한 개정조항에 문제 있어 본 개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이미 지난 4월 12일 집행위의 Deca-BDE에 대한 면제 추진에 대해 “입법권자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자 EU의 기본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경고한 바 있다.

이처럼 Deca-BDE를 놓고 계속되는 의회와 집행위간의 이견차이와 감정싸움은 이제 각료이사회에 달려있게 됐다. 표면적으로는 각료이사회에 구성된 지난 4월 TAC회의의 투표결과와 다르지 않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 이사회로서는 의회를 무시할 경우 초래되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사회는 본 사안을 정치적 결단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입장으로서 4년간의 예외라는 혜택을 기대하기 보다는 내년을 Deca-BDE 규제 시점으로 보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EU 집행위



중국판 RoHS, 발효일 연기 불가피

중국판 RoHS(정식 명칭 : 電子信息產品生產污染防治管理方法)의 최종 입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공표일과 발효일을 두고 일정조정에 들어갔다. 그동안 상무부, 품질감독검증검역총국 등 관계부처의 협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환경보호총국이 이견을 제출함에 따라 협의에 대한 부서의 최종 서명이 다소 미루어져 여러 차례 공표가 연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최근 정보산업부 장관, 국가발전개혁위 위원장과 환경보호총국 장관이 동석한 회의석상에서 이 규정안의 공표와 관련하여 논의한 후, 환경보호총국이 서명기로 합의했으며, 국가발전개혁위는 내부 의견을 조금 더 받아 수주 내로 최종

서명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보산업부는 최종 서명이 완료되는 대로 WTO TBT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보산업부의 원안대로 진행되었다면 동 규정안은 작년말 또는 올해 초 공표되고, 이번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부처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애초 계획했던 7월 1일 발효는 물 건너가게 된 것이다. 결국 WTO TBT위원회에 통보와 WTO회원국에 회람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당장 통보절차를 진행한다 해도 공표는 향후 4~6개월 정도가 될 것이며, 공표 후 6~12개월 후에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정안의 지연으로 내년(2006년) 7월 1일부터 제품에 함유된 주요 유해물질을 규제기로 한 시기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중국 정보산업부 내에서도 대두되기 시작했다. 물론 2006년 7월 이후로 유해물질의 제한시기를 잡아야 하나, 현재로서는 정보산업부 장관이 최종 서명하기 전까지 언제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중국내 여론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 정보산업부는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해 관련 표준 및 이행조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이를 준비중에 있다. 이러한 표준에는 유해물질의 최대허용치, 라벨링 요

건 및 적합성 증명을 위한 시험검사방법 등이 있다. 주요 이행 조치로는 납, 카드뮴 등 중국판 RoHS에서 규제하는 물질에 영향을 받는 제품군의 1차 목록 작성과 원산지표시, 독성물질 함유표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안전사용기간 등을 포함한 표시규정상의 여러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ElAtrack



독일 디젤차 입자상물질 배출표시제 도입 검토

최근 독일에서는 대기중 입자상물질(PM) 제한규정을 넘어서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연방환경부가 지난 4월 25일 디젤자동차의 입자상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이를 구분하는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앞으로 PM배출로 인해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안을 발표했다.

이 법령안은 디젤엔진을 장착한 트럭, 승용차 및 경량 다목적차를 대상으로 배출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여 표지 부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치는 연방배출규제법(BImSchG) 제40조에 의거한 자동차의 배기가스 규제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 5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디젤차에 대해 내년부터 한

시적으로 세금감면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조치가 승인됨에 따라 별도로 이를 우대하고 기존 디젤차량의 제한하기 위해 취하는 거리통행권에 관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출정도에 따라 가장 배출량이 많은 그룹은 표지를 붙일 수 없으며, 이러한 차량은 특정 구역 또는 거리의 통행이 금지된다. 두번째 그룹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EU의 자동차배기가스규제기준(Euro 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노란색 등근 표지를 붙일 수 있다. 이 기준은 구형차의 경우 촉매장치를 장착하면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이다. 세번째 그룹은 가장 배출기준이 엄격하여 Euro IV/V (트럭) 또는 V (승용차)에 해당하는데, 초록색 등근 표지를 붙일 수 있다.

배출량	표지	트럭	승용차	경량다목적차
고	없음 (부착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PM > 100 mg/kWh Euro 0 (PM기준없음), Euro I (PM 400 mg/kWh) 및 Euro II (PM 150 mg/kWh)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PM > 50 mg/km Euro II 또는 그 이하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ro II 또는 그 이하
중	노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PM < 100 mg/kWh Euro III 에 해당하며, 현재 유효한 제한임 구차량도 개장하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PM < 50 mg/km Euro III 에 해당하며, 개장시 달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ro III 에 해당하며, 개장시 달성 가능
저	초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PM < 20 mg/kWh Euro IV/V에 해당하며 EU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PM < 5 mg/km 제안중인 Euro V에 해당. 향후 생산차량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PM 5 mg/km 이하

독일 연방환경부는 촉매장치 장착시 트럭의 경우 60~80%의 PM배출 저감률을 보이며, 승용차보다도 구형트럭일 경우 더 큰 저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법령은 향후 관련기관간의 협의와 연방내각과 의회의 승인을 거쳐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독일 환경부



일본, CNG차량 도입모델지역 첫 지정

6월 22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올해 첫 시행하는 '압축천가스(CNG) 자동차 보급 촉진모델사업'의 일환으로 CNG버스 및 트럭의 도입선진모델지역에 사이타마현의 사이타마시와 효고현의 니시노미야시를 지정했다.

'CNG자동차 보급촉진모델사업'은 지정된 지역내에 지자체, 운송사업자, 가스사업자가 'CNG자동차보급촉진모델협의회'를 설치하고 계획적인 CNG차량 도입 및 급속충전





소 설치 등 CNG차 도입이 쉬운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을 받은 사이타마시는 2007년까지 CNG차량 116대와 CNG 급속충전소 2곳을 신설할 예정이며, 니시노미야시는 CNG차량 32대의 도입과 CNG 급속충전소 1곳을 신설하게 된다.

한편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2003년부터 CNG 버스·트럭 등 '자동차배출가스 신장기 규제' 준수 차량의 도입보조를 실시해 왔다. 올해는 '에코드라이브관리시스템(EMS)' 구축 보급에 대해서도 지난 4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특히 CNG버스 및 트럭에 대한 보조제도는 운송사업자 또는 리스사업자가 대상차량의 버스 2대 이상 또는 트럭 3대 이상을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 구입하는 경우 지자체 보조와는 별도로 국가가 일반차량가격과의 차액의 1/2에서 1/3을 보조하

는 제도이다.

일본가스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정부가 저공해 차보급 및 충전소정비를 위해 사용한 보조금은 경제산업성 109억엔, 국토교통성 65억엔, 환경성 6억엔 등 총 180억엔에 달한다. 이러한 보조금으로 인해 CNG 자동차 구입시 보조금은 경제산업성 및 국토교통성의 보조금과 지자체와 트럭협회 보조금 등이 중복 지급되고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차량 구입액과 거의 같다. 여기에 에너지개혁세로 인해 취득세액의 일부 공제 및 경감, 1년간 자동차세 50% 경감 등의 우대 조치도 더해지고 있다.

한편 3월 현재 일본내에 보급된 CNG 트럭은 약 1만여대, 버스는 1천여대가 보급되어 있다.

출처 | 국토교통성, 일본가스협회, 사이타마시 등



미국, 트럭 배출가스 새 측정방법 공표

미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6월 3일 신기술을 이용한 휴대용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실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디젤트럭이나 버스로부터 발생하는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입자상오염물질(PM) 등을 보다 정확하고 저렴하게 측정하는 시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기존 시험방식은 엔진을 트럭으로부터 분리하여 연구실에서 시험하는 방식(엔진다이내모미터)이었으나, 시험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정확성 또한 높지 않았다. 이번 새로운 프로그램에서는 측정기기를 엔진에 장착해 차량을 운행하면서 측정함으로써 실제 운전조건하에서 EPA의 배출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기술은 EPA와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위원회(ARB), 디젤엔진 제조업체가 공동 개발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한 것으로, 트럭이나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개인으로부터 자원봉사를 모집해 6월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7년 모델의 디젤트럭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EPA는 차량의 배출가스 시험 절차를 이번 최신의 측정 기술을 반영하여 수정한다고 발표하고, 아울러 이 규정을 모든 엔진에 적용되도록 통일적인 시험요건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 미국 EPA



중국, '공공건물 에너지절약 설계표준' 7월부터 적용

중국이 7월부터 '공공건물의 에너지절약 설계표준' (公共建筑节能设计标准)을 시행한다. 이 표준은 공공건물의 신축, 확장 및 개축에 있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도록 한 강제성 표준이다.

중국 건설부는 자국내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관련 법규를 준수하고자 건물에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면서, 향후 민간건물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준은 건축물 입지단계부터 해당기업은 향후 개발주택의 구

조형식에서 보온, 단열 등 에너지절약기능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능에 대한 기본정보를 '주택사용설명서'에 게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 표준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제 심사에 통과되지 않으며, 시공 및 감리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관할당국은 중국에너지절약법, 건설공사품질관리조례, 민간건물의 에너지절약관리규정, 공사실시 건설강제성 표준감독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동 표준의 부합여부에



대한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준공을 감독하게 된다.
중국건설부는 에너지 절약 등 '절약형사회건설을 위한 건축부
문 필수 4대 절약을 추진중이다. 이 표준은 이러한 전략의 일

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은 2010년까지 건물의 에너지 절
약 목표를 현재의 50%로 설정하고, 2015년까지 난방공급시
스템을 전국적으로 개혁할 방침이다. 출처 | 중국 건설부



바젤협약, PCBs 관리 지원 소프트웨어 발표

지난 5월 25일 바젤협약 사무국은 절연류로 주로 쓰여왔던
대표적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인 PCBs의 관리를 지원하는 소
프트웨어를 발표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코트디부아르, 잠비
아, 태국 등 아시아·아프리카 여러나라에서 실시한 PCBs관
련 국가프로젝트와 바젤협약의 이행을 위한 PCBs 관련 여러
활동에서 얻은 경험의 산물이다.

'PCBs목록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툴(DST)' 이라는 제
목의 이 소프트웨어는 목록의 작성 뿐만 아니라 정부나 현장
관계자가 PCBs와 PCBs를 포함한 기기를 처리할 때에 도움
이 된다.

특히 위해성 평가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폐기 또는 사용중
인 기기의 관리에 대한 교육과 구체적인 권고방법도 제공한

다. 또한 바젤협약 사무국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PCBs에 대
한 데이터를 수집·가공하거나 PCBs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및 PCBs처리 관리계획 등 중장기 계획수립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PCBs는 바젤협약의 대상이며 스톡홀름협약(일명 POPs협약)
에서 2025년까지 전폐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국은 각국 정
부가 국가이행계획(NIP)의 이행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를 요
청할 경우 무상으로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포는 바젤협
약 사무국, 스톡홀름협약 사무국 또는 UNEP화학물질담당국
이 담당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바젤협약과 스톡홀름협약 당
사국에 의해 시험을 거친 후에 추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출처 | 바젤협약 사무국



독일, 가정 폐기물의 매립전 사전처리 의무화

2005년 6월 1일부터 독일에서 사전처리를 하지 않은 가정폐
기물의 매립이 전면 금지됐다. 사전처리란 폐기물의 소각 또
는 기계적·생물학적 처리를 말한다.

독일은 6월 1일부터 폐기물매립령을 통해 매립전 사전처리
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최첨단 설비를 통해 폐
기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물질은 사전처리시 분리하고 에너
지원으로 활용가능한 폐기물도 에너지 회수로 활용토록 분리
하게 된다. 법령은 재이용할 수 없어 매립해야 하는 폐기물은
최고 3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폐기물은 기
술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매립하도록 하고, 열악하
고 기술적 모니터링이 어려운 매립지는 2009년까지 점진적
으로 폐쇄된다.

이번 조치를 위해 관련 산업계와 지방정부는 지난 12년동안
공동으로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특히 지방정부는 최근 4
년간 약 75억유로를 투자하여 약 120여개의 사전처리시설을
건설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 1만5천여명의 장기적 일자리가
창출됐다.

한편 EU 폐기물매립지침
에 따라 독일의 목표는 생
분해성 폐기물을 2006년 7월 16일까지 1995년 수준의 35%까
지 줄이는 것으로, 이에 독일 폐기물매립령은 폐기물 내 탄소
함유가 3% 미만인 경우에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
질적으로는 썩거나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유기물이 거의 함유
되지 않은 폐기물을 의미한다. 다만 1993년 2,800만톤의 생
분해성 폐기물을 매립한 것에 반해, 올해는 그 양의 5% 정도
만이 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미 2016년 목표를 달
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독일이 어느 국가보다도 목표를 조기이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독일 환경장관은 "다른 EU역내외 국가들은 아
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폐기물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이번 폐기물 사전처리무제의 시행은 한편으로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독일기업의 경쟁력을 강
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독일 선진환경기술을 수출
할 절호의 기회"임을 강조하였다. 출처 | 독일 환경부



➔ OECD 무역과환경 합동작업반 회의결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상인 연구위원



OECD 무역과환경 합동작업반(JWPTE) 회의가 2005. 6. 7 ~ 8간 개최되어 금년 의장단을 재구성하고, 지역무역협정과 환경, 환경상품과 서비스 교역 및 환경라벨링 관련 작업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2005년 의장단 구성 및 전차회의 합의에 따라 진행중인 작업들에 대한 토의, 관련 보고서 공개여부, 향후 작업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합의가 도출되었다.

의장단 구성에 있어 무역위원회측 공동의장으로 헤리엇 라파테르 네델란드대표가, 부의장으로 니콜 디스퍼 프랑스대표, 제니퍼 프레스콧 미국대표가 유입되었고, 환경정책위원회측 공동의장으로 필 켈러한 영국대표와 부의장 제롬 카티넬 캐나다대표가 유입된 외에 토니 클라크 스웨덴대표가 신입부의장으로 선임되었다.

작업결과 보고서 공개(declassification)여부 및 후속논의에 대해서는 지역무역협정과 환경 관련 작업문서의 공개가 유보되었으며, 6월말까지 회원국 추가검토의견이 접수될 예정이며, 에너지고효율 전자제품의 환경상품 포함 여부에 대한 기존 작업문서는 공개하기로 결정되었다. 재생에너지제품의 무역자유화 관련 사무국 scoping 문서들은 일단 현상태에서 공개하고, 추가적인 작업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환경친화상품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사무국 작업문서는 공개를 유보하고, 6월말까지 추가 검토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작업반은 후속 국제행사일정으로는 무역과환경세계포럼(Global Forum on Trade and Environment : GFTE)을 11. 3 ~ 4일간 코스타리카에서 개최기로 하였으며, 표준제도의 무역규범 합치성 평가관련 무역위원회 워크샵이 2006년 1월 중순 독일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작업반은 또한 환경라벨링에 대한 합동작업반의 추

가 작업을 제안한 캐나다 의견에 대해 작업반 차원의 추가작업 진행에 반대입장을 밝힌 미국 측에 상세한 입장을 서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외에 합동작업반 명의를 working paper 발간 및 작업반 작성 문건의 공개 결정권 수입에 대한 결정도 유보되었다.

차기회의 일정으로는 2005년도 2차회의가 11. 30 ~ 12. 1일간으로 결정되었고, 2006년도 1차회의는 6. 7 ~ 9일간 NGOs consultation(6.8)를 포함하여 개최될 예정이며, 영국은 2006년 2차회의 런던유치 의향을 표명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고효율제품 및 재생에너지 관련 논의에서 다수 회원국이 유연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RTAs상의 환경규제조항 및 환경친화상품, 환경라벨링 관련 논의에서는 EC와 미국을 대립축으로 하는 회원국간 이견이 상존함을 재확인하였으며, 이들 의제에 대한 합동작업반 내에서의 논의는 현재 진행중인 WTO DDA 관련 협상과 무관하다는 일부 회원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의 협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쟁점에 대한 국내 조사연구를 포함한 정책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수회원국이 환경과 무역 및 개발의 조화를 위한 개도국 능력형성과 기술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out-reach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올 초 서울에서 개최된 UNESCAP 환경개발장관 회의에서 우리정부가 제시한 “녹색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와 같은 우리나라 주도 능력형성 지원프로그램의 활용 등, 우리나라의 기여 가능분야를 발굴하여 관련 국제동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U각료이사회, 집행위의 수은규제안에 동의

지난 6월 24일 각료이사회에서 EU회원국 환경장관들은 늦어도 2011년까지 수은의 수출을 일체 금지하는 집행위의 규제안에 찬성하는 결정을 채택했다.

집행위의 수은 규제조치는 공급과잉과 폐기 단계까지도 고려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도계, 치과용 이빨감 및 배터리와 같은 제품에 사용되는 수은의 사용 또한 규제되게 된다. 이번 수은 규제조치가 발효되면 EU내에서 유일한 수은 광산을 보유한 스페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각료이사회는 수은광산의 폐쇄로 야기되는 실업문제, 오염지역의 회복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EU차원의 지원을 모색할 것을 집행위에 요구했다. EU는 조만간 역내의 염소화알칼리(chlor-alkali) 제조산업에 대해 대규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수은생산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EU내 염소화알칼리산업 생산자는 2020년까지 공장을 폐쇄 또는 전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그린피스, EEB 등 환경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에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2011년까지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수은의 수출 금지 시한을 2008년으로 앞당길 것을 주장했다.

출처 | EU각료이사회 등

뉴욕시, 폐전자제품 재활용 조례안 상정

지난 5월 뉴욕시가 미국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조례안(Electronic Equipment Recycling and Reuse Act of 2005)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전자제품 제조업자로부터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용대상 전자제품의 재사용, 재활용 및 적절한 폐기를 위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2010년부터 최소회수율 30%, 2018년부터는 80%를 만족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폐전자제품의 회수 및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제조자가 부담하며, 이러한 비용을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했다. 적용대상 제품은 TV, 노트북,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며, 법안은 2009년부터 이를 위반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뉴욕시 내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제정 움직임은 최근 미국내 관련 법안 제정 노력중 가장 EU의 폐가전제품처리 지침(WEEE)에 가까운 법이면서, 더불어 유사한 법제정 움직임이 환경에 비교적 보수적인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단초이다. 특히 이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주요 주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지자체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처 | 뉴욕시의회

REACH, 각료이사회 협의단계로

지난 6월 개최된 각료이사회 산업장관회의에서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평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데 각국 장관들이 동의함에 따라 REACH 수정에 대한 회원국간 정치적 협의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회의에서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산업장관은 "현재까지 50여 건에 달하는 REACH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이 실시되었는 바 이제 더 이상의 영향평가는 무의미하다"면서 "이제는 REACH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회원국의 산업장관들이 환경장관들에 비해서 이 정책에 대해 좀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회원국 산업장관간의 협의개시 결정은 향후 REACH 입법화에 주요한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작년 11월 회의에서는 일부 회원국이 영향평가 작업을 좀더 진행하고 난 후에 회원국간 정치적 협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한 바 있어 지금까지 연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

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회의 1차 독회가 끝나는 올 9월 경부터 REACH 수정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연말에는 각료간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장관들은 REACH하에서의 유럽화학물질관리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의 권한 범위에 대해 논의하였는 바, 등록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여부 결정에 대한 중립중화가 필요하지만, 그 대상물질 선정 등 이행계획 수립에 회원국 주무기관이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출처 | EU집행위

미 캘리포니아주, 온실가스 2050년까지 80% 감축



올해 UN의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기념 이벤트는 6월 1일부터 5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캘리포니아는 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까지 2000년 수준으로,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1990년 기준으로 약 80%를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했다.

녹색도시(Green Cities)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세계환경의 날 행사에서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논쟁은 끝났다. 우리는 과학을 믿고 있으며,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는 지 알고 있다"면서 "이제는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출처 | UN 세계환경의 날

공 지 사 항

- ⇒ 해외환경규제동향에서는 '전문가 리포트' 코너에 게재할 원고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 ⇒ 본지의 궁금한 사항이나 해외 신규제에 대한 제보가 있으신 분은 아래 환경마크 협회내 TEN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TEN 온라인정보시스템(www.ten-info.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환경마크협회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5년 7월부터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국제회의 정보

- 1 7. 4. ~ 7. 8. 바젤협약 제4차 세션 워킹그룹(스위스 제네바)
- 2 7. 4. ~ 7. 8. 몬트리얼의정서 다자기금 실무위원회 제46차회의(캐나다 몬트리얼)
- 3 7. 5. ~ 7. 6. WTO 무역환경위원회 정례회의(CTE) (스위스 제네바)
- 4 7. 6. ~ 7. 8. G8 정상회담(영국 퍼트서)
- 5 7. 7. 국제에너지워크샵(일본 고토)
- 6 7. 7. ~ 7. 8. WTO 무역환경위원회 특별세션(CTEss) (스위스 제네바)
- 7 7.11. ~ 7.12. EU 배출권거래 컨퍼런스(벨기에 브뤼셀)
- 8 7.12. ~ 7.14. 제3차 유독성 산업화학심포지엄(미국 리치몬드)
- 9 7.27. ~ 7.28. 불법벌목에 관한 이해관계자 협의(영국 런던)
- 10 8. 3. ~ 8. 4. DHS 공급망관리 워크샵(미국 디어본)
- 11 8. 6. ~ 8.12. Solar World Congress(미국 올랜도)
- 12 8.10. ~ 8.11. 중국 전력 컨퍼런스(중국 베이징)
- 13 8.17. ~ 8.19. 국제에너지프로그래밍가 컨퍼런스(미국 뉴욕)
- 14 8.21. ~ 8.26. Dioxin 2005(캐나다 토론토)
- 15 8.23. ~ 8.25. 건강과 생물다양성 컨퍼런스(아일랜드 갈웨이)
- 16 8.31. ~ 9. 1. H₂ Expo 2005(독일 함부르크)

2005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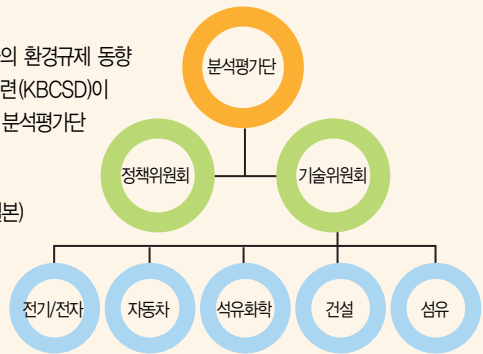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	21	22
	24/31	25	26	27	28	29
						30

2005년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EN시스템운영체제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는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가의 환경규제 동향을 조기 수집하여 기업체에 전파하기 위하여 환경부와 전경련(KBCSD)이 구축한 정보네트워크로 50여명의 각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석평가단을 통해 대응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의 해외(유럽, 미국, 중국, 일본) 정보 수집, 분석, 평가 및 네트워크 운영은 환경마크협회, KOTRA,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행처 :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613-2 환경마크협회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사무국
 전 화 : 02-358-6800(#133) | 팩 스 : 02-358-8561 | 이메일 : tomasyoon@kela.or.kr